

5월 美·캐나다産 쇠고기 밀려오나

국제수역사무국, 美·加 '광우병 통제국' 인증 뼈 포함 쇠고기 개방 압력 더욱 거세질 듯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미국과 함께 광우병으로 2003년 6월 이후 대(對) 한국 쇠고기 수출길이 막힌 캐나다 역시 이번 평가에서 같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뼈를 포함한 모든 쇠고기를 즉시 수입하라"는 두 나라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미국 농무부(USDA), 캐나다 식품검역국(CFIA) 홈페이지와 농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OIE

역 전문가 패널은 작년 말부터 이달 초까지 미국·캐나다 등 12개 나라가 제출한 광우병 위험 관리 보고서를 검토해 각국의 위험 등급을 정했고, 최근 열린 OIE 질병위원회는 이 가운데 11개국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검토 의견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캐나다는 세 등급 가운데 중간 수준인 'Controlled risk(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Negligible risk(광우병 위험 없음)' 보다

는 낮지만 'Undetermined risk(위험도 미정)' 보다 높은 것으로, 해당 국가가 광우병 발생 가능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과학적 조사 체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또 교역 측면에서 이 등급을 받은 나라의 쇠고기는 두개골·척추·관도·회장원위부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되면 원칙적으로 수입 과정에서 부위나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 등급 분류가 확정되는 오는 5월 OIE 총회를 전후로 우리나라에 '30개월령 미만, 뼈 없는 쇠고기만'이라는 현행 수입 위생조건의 개정을 공식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캐나다 역시 조만간 OIE 등급을 근거로 미국과 보조를 맞춰 우리나라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나라에 대한 OIE 평가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우리 정부는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본격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곧 OIE의 평가 보고서가 도착하면 이를 꼼꼼히 살펴 의문스러운 부분, 해명이 미흡한 부분 등을 앞으로 총회나 한·미 간 협의 등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OIE는 규정에 따라 이번 등급 분류 결과를 60일 이상 우리나라를 비롯한 167개 회원국에 회람시키고, 오는 5월 넷째주(20~26일)에 열리는 파리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큰 이의가 없으면 민장 일치 형식으로 추진하고, 몇 개 나라가 강하게 반대할 경우 투표를 거치게 된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실종된 '생활정치' 복원을



정후식

정치부 차장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광주·전남 시·도당이 최근 새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8일 경선을 통해 이상열 의원(목포)을 위원장으로 7일 김영진 전 의원을 추대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날 집단 탈당 소용돌이 속에서 광주시당위원장에 지병문 의원(광주 남구)을, 전남도당위원장에 서갑원 의원(순천)을 각각 임명했다. 사무처 당직자 개편도 뒤따랐다.

이번 지도부 구성은 정계개편과 대선 정국을 앞둔 '지역 조직 추스르기' 성격이 강하다. 신임 위원장들도 취임 일성으로 '대통합과 정권재창출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통합신당인지, 누구를 위한 정권재창출인지에 대한 설명은 빈약하다. 내세우는 논리는 그럴듯 하지만 듣고 나면 공허하다. 그 뿌리에 '민생'이 빠져 있는 탓이다. 때문에 이런 주장은 정치인들의 입신(立身)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동안 양 당의 광주·전남 시·도당은 지방정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서로 '호남의 맹주'임을 자처하면서도 추락해가는 지지율이 이를 반증한다. 퇴락 한나라당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지역의 '민생'과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고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정당의 책무 중 하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 이를 행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다. 갈등을 조정하고, 정당활동에 주민들의 참여를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른바 '생활정치'의 실천이다.

하지만 그동안 광주·전남 시·도당은 정책이 아닌 선거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다. 선거때만 으레 '주민속으로'를 외쳤지만 막상 끝나면 민생문제에는 뒷집을 저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올해는 광주 문화중심도시의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내야 하고 전남은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F1 사업 등이 결판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지역 정당들의 관심은 풍발에 가 있는 듯 하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열린우리당 시·도당의 활동은 눈여겨볼만 하다. 최근의 영세상인을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운동을 비롯 학교급식·장애인 지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상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시각차는 있지만 한·미FTA와 F1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당원 토론회를 거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로 취임한 우리·민주당 위원장들 역시 '주민속으로'를 다짐하고 있다. 신임 시·도당위원장들의 약속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분발을 기대해 본다.

/who@kwangju.co.kr

총영사들 '해외여행자 1천만 시대' 꿈

“추한 한국인 이제 그만”

거리서 담배 피고 침 빨고
떼 지어 명품 쇼핑 끝낼건

“현지경찰 조사 협조하라”

최근 서울에서 열린 총영사회의 참석자 일시 귀국한 3명의 총영사들이 한국 여행자들의 '자화상'과 여행자들이 유념할 점 등에 대해 견해를 피력했다.

김종해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 이종철 주 센다이(仙台) 총영사, 전재만 주 광저우(廣州) 총영사는 지난 8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좌담회 형식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추한 한국인'에 대한 고언(苦言)과 함께 '해외여행자 연간 1천만 시대'에 맞춰야 할 자세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추한 한국인' 이제 그만=세 총영사들은 자신들이 주재지에서 본 전형적인 '추한 한국인상'을 소개했다.

독일에 주재하는 김 총영사는 "유럽 선진국에 여행은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질서를 잘 지키는 편이지만 거리에 담배를 버리거나 침을 빨는 사례는 자주 있다"며 "현지인들이 이를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공방에서 고품을 지르는 사람을 보면 한국인이 많다"며 "동양인 중에 한국인과 중국 남방 사람들이

유난히 '시끄러운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인들이 무리를 지어 명품 쇼핑에 나서는 것도 '벼락부자'들이 돈을 쉽게 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현지인이 한국에 대해 갖는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주재하는 이 총영사는 "요즘 한국 관광객이 많다 보니 관광지의 안내문에는 일본어 밑에 한국어를 병기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의 한 시골 온천에는 삼쥬, 화장품 밑에 일본어 없이 한국어로만 '가져가지 마세요'라고 쓰여 있더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소개했다.

광저우의 전 총영사는 "한번은 광저우의 북한 식당을 찾은 한국 관광객 20여명이 종업원들의 공연용 무대를 목격한 채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민원 신고가 접수된 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것 만은 지켜 달라=김 총영사는 유렵 등지의 선진국에서 현지 경찰이 조사를 하겠다고 할 경우 반드시 협조적으로 임할 것을 강조했다.

또 전 총영사는 "해외에서는 자신의 안전은 본인이 지킨다는 생각을 하면 좋겠고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당부한다"면서 "여권 분실 신고를 세 차례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을 매매했을 개연성을 감안, 수사의뢰를 하게 돼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11일 한미 FTA 협상이 열리고 있는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스캇 퀴엔베리 미국 무역대표부 수석협상관이 미의회가 무역대표부에 전달한 섬유관련 서한의 내용을 협상과정에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농업-美 자동차 “최후의 결전”

한미FTA 협상나흘째 농업 등 핵심분야 기싸움 정부조달 이어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 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마지막 공식협상인 8차 협상에서 통관분야가 세번째로 타결되는 등 비핵심 쟁점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서비스부문에서는 기술사와 건축사의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섬유분야 협상에서는 미국이 지난달에 이어 다시 우리측 기대에 크게 미달한 양허안을 제시, 결렬됐고, 농업과 자동차 등 핵심 쟁점분야에서도 한 치의 양보없는 기싸움이 전개됐다.

협상4일째인 11일 양측 협상단은 회담장인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만나 농업·섬유·투차·의약품 등 '딜 브레이크'

급 대형 쟁점분야를 중심으로 타결점을 모색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경쟁과 정부조달에 이어 이미 쟁점을 대폭 축소한 통관분야가 타결됐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양국간에 수출입 화물의 통관절차 간소화 및 신속처리, 제3국 물품의 우회수입방지를 위한 원산지 현지검증, 세관협력 등을 골자로 한 협정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해 "수석대표나 통상교섭본부장급의 고위급 회의를 2차례 더 필요할 것"이며 "마지막까지 남겨 될 쟁점은 우리의 농업과 미국의 자동차"라고

예상했다.

양국 정부는 20일 전후 고위급 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졌으며 2차례의 고위급 회의에는 양국 정부의 검토와 결정 과정이 남는다.

김 수석대표는 "농업분야에서 미국이 원하는 핵심은 쇠고기"라며 "쇠고기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농업 부분에서는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핵심 쟁점분야 분과 협상은 이날도 난항을 겪었다. 양측의 의견차가 큰 농업분야에서는 민감품목에 대한 본격 조정을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농업분야 고위급 협상으로 미룬 탓에 이날 협상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민감품목 235개 대부분을 포함, 280여개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그린장래식당

그린종합상조 회원이 되시면 회원님께 더욱 이익이 되고 믿을수 있습니다

경쟁 고생만 하신 부모님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월 2~3만원 취비로 복잡한 정례준비 걱정 끝!

- 1. 회원이 되면 1000원~2000원 후원금 지급
- 2. 회원이 되면 1000원~2000원 후원금 지급
- 3. 회원이 되면 1000원~2000원 후원금 지급
- 4. 회원이 되면 1000원~2000원 후원금 지급
- 5. 회원이 되면 1000원~2000원 후원금 지급
- 6. 회원이 되면 1000원~2000원 후원금 지급
- 7. 회원이 되면 1000원~2000원 후원금 지급
- 8. 회원이 되면 1000원~2000원 후원금 지급
- 9. 회원이 되면 1000원~2000원 후원금 지급
- 10. 회원이 되면 1000원~2000원 후원금 지급

그린종합상조(주)
14개 그린장래식당

문의: 02-772-7441